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4년 3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3월부터 전국 72개 시군구로 확대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선정 완료 -
-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기대 -

-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는 작년보다 재택의료센터 수는 67개소(28→95개소), 지역 수는 44개(28→72개) 증가하여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 2차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더욱 넓혔다. 1차 시범사업('22.12월~'23.12월)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의료기관이 운영되었으나, 2차 시범사업('24.1월~12월)은 60개 시·군·구, 82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올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또한,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3월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의료기관 수〉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1차 공모	추가 공모
서비스 제공 기간	'22.12월~'23.12월	'24.1월~12월	'24.3월~12월
참여 시군구, 의료기관 수	28개 시군구, 28개 의료기관	60개 시군구, 82개 의료기관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
		▲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 * 1차, 추가공모 선정 시군구 1개 중복	

-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은 5등급, 인지기원등급까지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확대하여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681. 요양보험제도과. 2024. 3. 5.

II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확대

-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 정신건강인력 역량강화교육 계획 -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2024년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에 종사하는 정신건강인력 1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교육, 지자체 공무원 교육,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교육,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이해·정신건강 자가검진 척도의 이해·주요 정신질환의 이해와 위기개입·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 사례관리 실천과 상담 등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 대국민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사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대면 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며, 특히 종사자들의 근무 연속성 보장, 교육 접근성 확대, 교육 이용 편의 증대 등을 위하여 정보 및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은 동영상 교육을 중심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http://www.ncmh.go.kr>),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러닝 플랫폼 공동활용 홈페이지(<http://ncmhedu.kohi.or.kr>),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http://www.ncmg.go.kr:2450/>) 등 다각적인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재활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중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하여 정신건강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국가의 책무다”라며 “정신건강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연계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발하여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708. 정신건강교육과. 2024. 3. 11.

Ⅲ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24.3월 말부터 낮시간 그룹형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개시 -
- '24.6월부터 24시간 개별형 등 서비스 제공 예정 -

-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여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22년에 국정과제로 선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2024년 6월 법 시행 예정(제29조의3)
-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 하되, 주말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 서비스 대상자는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하여,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

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과 제공기관 공모 안내는 붙임과 별첨자료 참조

-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그동안 도전행동이 심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739. 장애인서비스과. 2024. 3. 19.

참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요**

■ 서비스 대상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대상) ①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②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 항목 >

구분	항목	세부 항목	배점
I. 핵심 구성요소 (70점)	일상생활능력	도전행동	0~40점
		일상생활능력점수	0~20점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의사소통능력	0~10점
II. 지원 필요도(10점)	개인특성(3점)	건강·장애특성	0~3점
	사회환경특성(7점)	가정내 보호체계	0~7점
III. 지역발달센터 조사원 종합평가 (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0~5점
IV. 서비스조정위원회 종합평가 (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3~15점
합계			100점

■ 지원 내용

-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선정기준에 따라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24년 총 722억 원)
 - ① (24시간 개별 지원)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340명, 176억 원)
 - * 산책, 체육, 음악, 미술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 훈련 지원
 - ② (주간 개별 지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500명, 142억 원)
 - ③ (주간 그룹형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1,500명, 405억 원)

IV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3월 29일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하였다.
-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관련 통계 분석 결과,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으로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498만 명으로, 전체 973만 명 중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이다.
-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 원으로, 2022년 58만 6천 원 대비 5.8% 늘었으며, 지난 2000년 24만 6천 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여 약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 8천 명으로 2022년 5천 4백 명 대비 3.3배로 늘어났으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되었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 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92만 명, (농어업인 지원) 36만 명,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15만 명, (예술인 지원) 0.2만 명

** (실업크레딧) 56만 명, (출산크레딧) 0.5만 명

- 이슬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 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 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785. 연금급여팀. 2024. 3. 28.

V

아동 출산·양육 지원, 보호와 자립까지, 아동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이기일 제1차관, 인천광역시청·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 방문 -
- 인천시 위기임산부 핫라인 운영 경험 듣고 보호출산 준비 상황 점검 -
- 인천형 아동수당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 논의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29일(금) 15시 30분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위 기임산부의 임신·출산 지원과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 장 종사자와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 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보건복지 부는 2024년 7월 제도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이기일 제1차관은 선도적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핫라인*”을 운영해 온 인천광역시의 경험을 듣고, 특히 현장 의 준비가 중요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와 관련하여 상담기관 지정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또한, 만 18세까지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려는 인천광역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위기임산부 보호 핫라인(인천 자모원): 1:1 맞춤 상담, 일시보호, 출산 의료지원 등

**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0~18세)에게 기존 정부 지원(72백만원)에 인천시 사업(28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

- 이후, 관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정기적인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인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방문하여 기관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인천 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자립지원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 후 사회로 진출한 청년

- 이기일 제1차관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중앙과 지방이 협심해야 한다”며, 삶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일선 공무원과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 “올 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 제도가 시행되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과 그 아동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과 아동보호체계를 탄탄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마다 운영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자립준비청년에게 든든한 지지 체계가 되어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799. 아동정책과. 2024. 3. 29.